2014 국가 7급 행정학 해설

1. 정답 ①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 혹은 기능 간 경계 없이 유기적으로 혹은 이음매 없이(seamless)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행정농도(administrative intensity)란 조직의 모든 인력 중 간접인력(참모와 관리직)의 비중인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중간관리자가 줄어들면서 행정농도가 낮아지기도 한다.

2. 정답 ②
ㄴ.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아닌, 인지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수의 대안만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한다.
ㄹ. 앨리슨 모형은 쿠바미사일 위기 때 해상봉쇄 결정에 대해 세 가지 시각(합리적 행위자, 조직과정, 관료정치)을 통해 설명한다. 지문의 내용은 쓰레기통 모형

3. 정답 ③
① 애드호크라시는 공식화 정도가 낮고, 분권화되어 있으며, 수직적 분화의 정도가 낮다.
② 공식화는 업무수행방식의 표준화 정도이다(④번이 여기에 해당).
④ 집권화는 의사결정권한의 집중 정도이다(②번이 여기에 해당).

4. 정답 ①
각각의 기관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니므로 행동·규범의 기준을 공유하기 어렵다. 즉 조직정체성이 약해서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렵다.

5. 정답 ④
제도의 개념을 구제도주의는 정태적으로 파악하고, 신제도주의는 동태적으로 파악한다. 예컨대 구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법으로 규정된 유형적 정부기관인 반면, 신제도주의에서는 정부제도와 민간부문의 제도들의 역동적 관계인 정치적 네트워크의 개념으로서 무형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③ 신제도주의자들은 행태주의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정치 현상의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는 포괄적 이론을 개발하는 데만 주된 관심을 기울인 문제점에 주목했다. 즉 산업화된 국가들이 상이한 정책을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는데, 설명 요인으로 각국의 제도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국이 채택한 정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로서 제도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6. 정답 ④
ㄷ. 건강보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한다.
ㅁ. 전기와 고속도로는 요금재이다.

7. 정답 ③
① 정책분석을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② 참여관찰법, 심층면접법은 질적 기법이다.
④ 현실적 제약으로 진실험적 방법보다는 준실험적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8. 정답 ①
무의사결정이란 새로운 정책의제가 상정되어 기득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의사결정자가 폭력, 혜택박탈이나 새로운 이익의 제공,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 강조 또는 미리 규칙이나 절차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 등으로 그 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9. 정답 ②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면,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정답 ①
① 지방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보다 재산과세 비중이 높고, 재산과세 중 재산거래과세가 재산보유과세보다 비중이 높다.
②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③ 자주재원(지방세수입+지방세외수입)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더하면 재정자주도이고, 자주재원에 국한시키면 재정자립도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자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일반재원), 국고보조금은 자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특정재원).

11. 정답 ②
다양한 수준의 정부와 민간부문의 행위자 및 조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뉴거버넌스는 참여와 협력 등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다.

12. 정답 ④
ㄱ. 부실기업 구조조정 - 규제정책(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이나 사기업의 활동 및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를 가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ㄴ. 노령연금제도(사회보장제도) - 재분배정책(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ㅂ.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분배정책(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추출정책은 조세, 병역, 노역 등과 같이 국내적·국제적 환경에서 물적·인적 자원을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고, 상징정책은 국기 게양이나 왕족이나 고관의 방문처럼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정책이며, 구성정책은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에 관련된 정책으로 주로 정부기구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13. 정답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로 해임된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파면된 경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廢職)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이때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고, 강등(降等)은 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4. 정답 ②
공급횡령은 거래 당사자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사기형 부패이고, 거래형 부패는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면서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다.

15. 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群)을 말한다. 이러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등)에 임명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하므로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다.

16. 정답 ③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17. 정답 ②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8. 정답 ③
전통적 예산원칙(입법부 우위) 중 한정성 원칙은 ㉠목적 외 사용금지(예외: 이용, 전용), ㉡초과지출 금지(예외: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외: 예산의 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난 연도 수입과 지출, 앞당겨 충당·사용)의 세 측면으로 구성된다.

③ 특별회계는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19. 정답 ①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주요항목 단위(장·관·항)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각 법률로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서,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 하나와 유사하다. 특별회계 설치요건에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예: 교통시설특별회계),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예: 재정융자특별회계),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예: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이 있다.
④ 일반회계·특별회계는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한 통제를 한다.

20. 정답 ④
롤스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에서 말하는 자유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 즉 자유가 무제한적·이기적이 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
① 공익 과정설은 사회 속의 수많은 이익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 간의 민주적 분쟁해결과 그를 위한 과정 및 이를 통한 타협의 결과가 공익이므로 현실적이고, 개인주의적 측면을 잘 반영한다.
② 공익 실체설은 공익이란 사익의 단순한 집합(벤담의 공리주의)이 아니며, 사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실제의 가치관이 어떤가와 관계없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궁극 목표 내지 최고선이다.